

미리 보는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및 트럼프 주요 정책 공약

- ◆ 내년 미국 대선과 의회선거, 여론조사 동향, 주요 관전포인트 등 점검
- ◆ 아이오와 코커스 향배, 트럼프 사법 리스크, 바이든 후보 경쟁력, 제3 후보 효과 등 주목
- ◆ 트럼프 공약 키워드 : 경제(미국/성장 우선) · 무역(상호주의) · 에너지(자립) · 대외(고립주의)

1. 2024년 미국 연방 선거 개요

① (대선) 60번째 미합중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가 내년 11.5(화) 개최

-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포함 6명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
- 공화당은 7.15~18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19~22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공식 추대 예정
 -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지명 외에도, 새로운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을 공개하여 양당이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정책 향배를 가늠할 기회 제공

② (의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선거 진행

- (하원) 전원 435석을 두고 전국 선거 개최. 지난 '20년에 치러진 연방의회 중간선거로 결정됐던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변동 여부에 관심
- (상원) 전체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33석과 보궐선거(2석) 포함 총 35석을 두고 양당 대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2석 차 다수당 지위 수성 여부가 관건

< 현 118대 연방의회 의석 현황(석) >

구분 (정원)	민주당	공화당	기타(공석)
하 원 (435)	213	221 (다수당)	1
상 원 (100)	51* (다수당) (* 무소속 3명 포함)	49	-

[자료] 미국 연방의회 홈페이지(12.19 기준)

③ (주지사) 11개 주*와 2개 미국령(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에서 주지사 선거

- 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8개 주, 민주당 현직 주지사가 3개 주로 분류*되며, 뉴햄프셔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현재 박빙의 경합지역으로 나타남.
- * 현 주지사 소속 정당 : 델라웨어(민), 인디애나(공), 미주리(공), 몬태나(공), 뉴햄프셔(공), 노스캐롤라이나(민), 노스다코타(공), 유타(공), 버몬트(공), 워싱턴(민), 웨스트버지니아(공)
- 현재 50개 주 주지사 소속 정당 비율은 공화당 27 : 민주당 23으로 공화당 우세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일정 >

구분	일정	내용
경선	1.15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
	1.23	뉴햄프셔
	2.03~3.04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건 등 7개 주
	3.05	슈퍼 화요일(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16개 주)
	3.12	조지아, 하와이, 워싱턴 등 4개 주
	3.19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5개 주
	3.23	루이지애나, 미주리
	4.02	뉴욕, 위스콘신 등 5개 주
	4.13, 4.20	와이오밍(민주당 4.13, 공화당 4.20)
	4.23	펜실베이니아
	5.07	인디애나
	5.14	메릴랜드 등 3개 주
	5.21	켄터키, 오레곤
6.04	뉴저지, D.C 등 5개 주	
전당대회	7.15~18	공화당 전당대회 (위스콘신주 밀워키 개최)
	8.19~22	민주당 전당대회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최)
후보 토론	9.16	대통령 후보 1차 토론 (텍사스 개최)
	9.25	부통령 후보 토론 (펜실베이니아 개최)
	10.01	대통령 후보 2차 토론 (버지니아 개최)
	10.09	대통령 후보 3차 토론 (유타 개최)
투표	11.05	2024년 대통령 선거일
	12.17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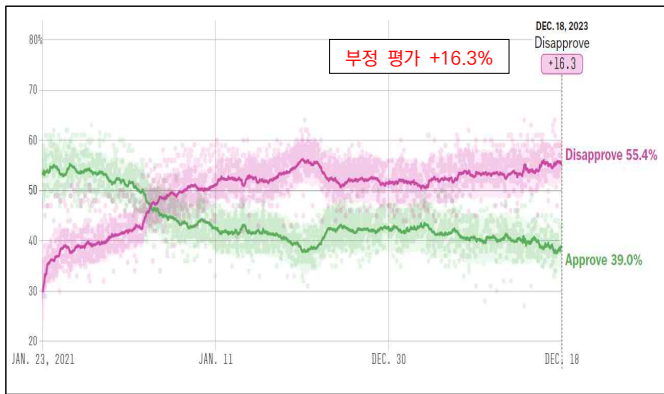
[자료] NBC, 270toWin.com

2. 선거 여론조사 동향

①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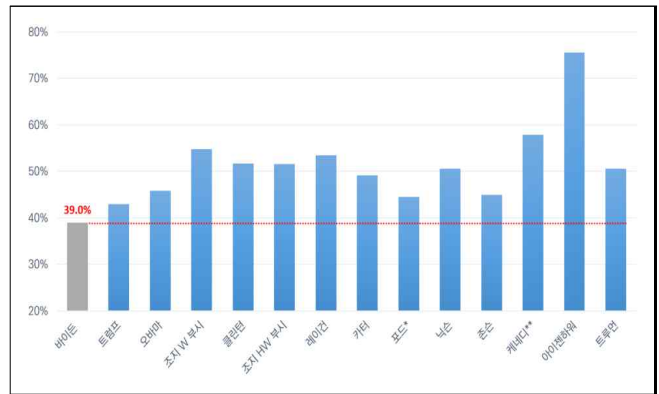
- 대선을 약 11개월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적신호
 - 12.18 현재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평균은 긍정 39.0%, 부정 55.4%를 보여 16.3% 차이로 부정 의견 월등
 - '21.9월 부정이 긍정 여론을 역전한 후, 부정 평가가 두 자릿수 격차로 우세 유지
- 취임 1,063일 차를 맞은 바이든은 동 시점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 기록 중
 - 역대 최저 국정 수행 지지도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 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도가 순탄치 않을 전망
 - 바이든 대통령 부정 평가는 △백인(59%) △고졸 이하(57%) △농어촌 지역(65%) △남성(54%) △40세 이상(54%) △저소득층(53%) △남부지역(59%)에서 높게 측정

< 바이든 국정 수행 평가 여론(12.18) >



[자료] fivethirtyeight.com

< 취임 1,063일 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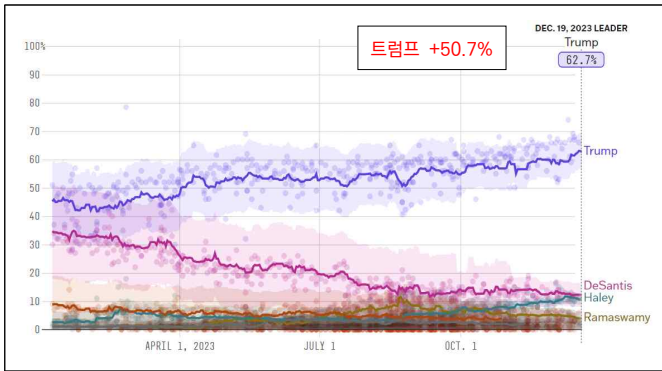
[자료] fivethirtyeight.com *포드(856일차) / **케네디(1,024일차)

②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압도적인 선두 유지
 - 12.19 현재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는 63%에 달해, 2위 드산티스 후보 등과 50% 이상 격차를 벌리며, 공화당 후보로 선출 유력시 (11.29~12.17 8개 여론조사 평균)
 - *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 지지율 : 트럼프(62.7%), 드산티스(12.0%), 헤일리(10.9%), 라마스와미(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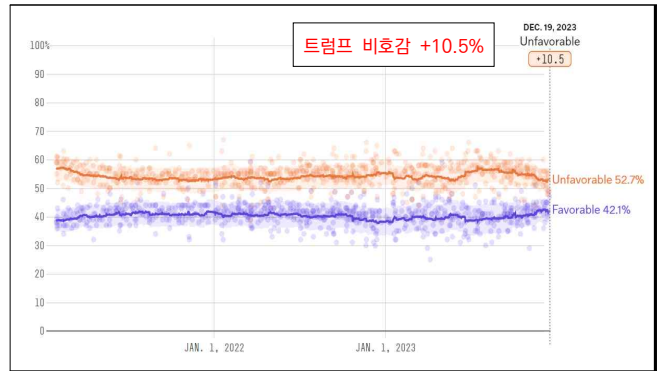
-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여론(52.7%)이 호감(42.1%)에 비해 여전히 10% 이상 높으나, 근래 비호감은 감소하고 호감도는 상승하여, 호불호 격차가 눈에 띄게 감소 중
 - *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54.7%), 호감(39.8%)으로 비호감 14.9% 우세

<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



[자료] fivethirtyeight.com (12.19 기준)

<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비호감 여론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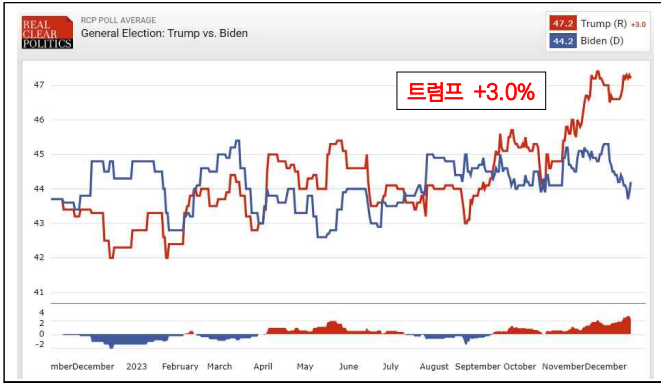


[자료] fivethirtyeight.com (12.19 기준)

③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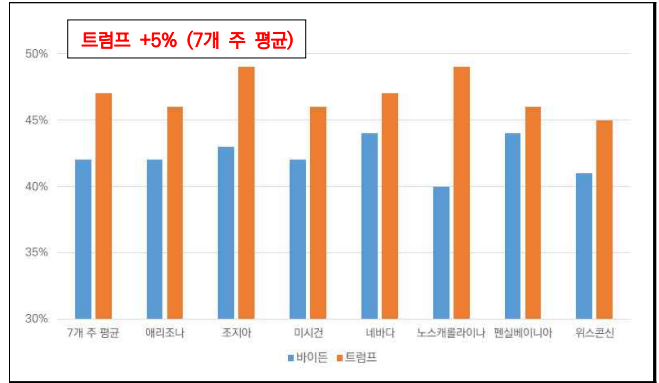
- 바이든 대통령,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주요 공화당 후보에 열세
 - 올해 11월경을 전후로 여론이 바이든 내림세, 트럼프 상승세로 극명하게 분기. 현재(12.19) 양자 가상 대결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평균 3.0%* 우세
 - * RealClearPolitics 집계, 12.4~12.17 전국 9개 여론조사 평균
 - 유권자가 선정한 최대 대선 이슈*인 '경제 문제 해결'에서 트럼프(59%)가 바이든(3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여론은 바이든노믹스에 박한 평가 중
 - * 대선 중대 의제 여론 : 경제(19%), 이민(11%), 범죄(10%), 환경(7%), 불평등(7%), 보건(6%) 등 순
 - 바이든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2, 3위 후보에도 뒤지는 조사에 민주당 비상. 드산티스에 0.9%, 헤일리에 5.9% 격차로 열세를 보여 충격
- 선거 승패를 결정할 대표적인 경합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조사 속출
 - 블룸버그/모닝컨설트 여론조사(11.27~12.6) 결과, 대표적 7개 스윙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평균 5% 포인트 우세를 보임.
 - *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 특히,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에 우세 기록

< 바이든-트럼프 양자 대결 여론조사 >



[자료] RealClearPolitics(12.19) 여론조사 평균

< 주요 경합 주 바이든-트럼프 지지율 비교 >



[자료] Bloomberg News/Morning Consult(12.14)

○ 바이든-트럼프 양자 대결을 가정하여 대통령 선거인단 시뮬레이션 결과, 트럼프가 당선 한계선인 대의원 270명 돌파 분석 (270toWin 집계)

- 12.19 기준 여론조사 집계 결과, 트럼프 우세 지역은 28개 주, 바이든 우세 지역은 17개 주(D.C. 포함), 경합 분류 지역은 6개 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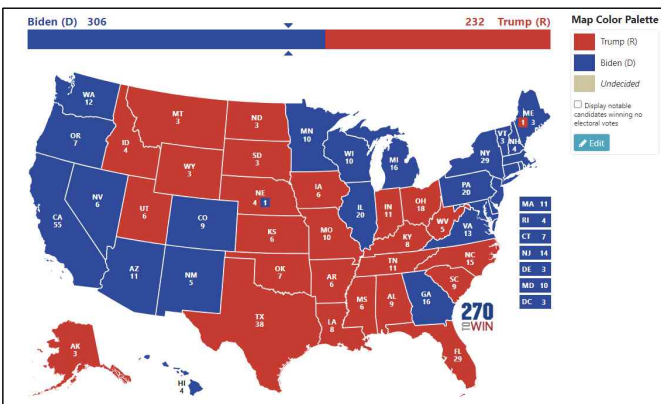
*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콜로라도, 네바다

- '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등에서 트럼프가 여론조사 우위를 보이면서, 바이든은 최소 42명 선거인단 손실* 분석

- 현재까지 여론조사 판세를 분석했을 때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트럼프 277명 확보, 바이든 193명 확보, 미정(경합) 68명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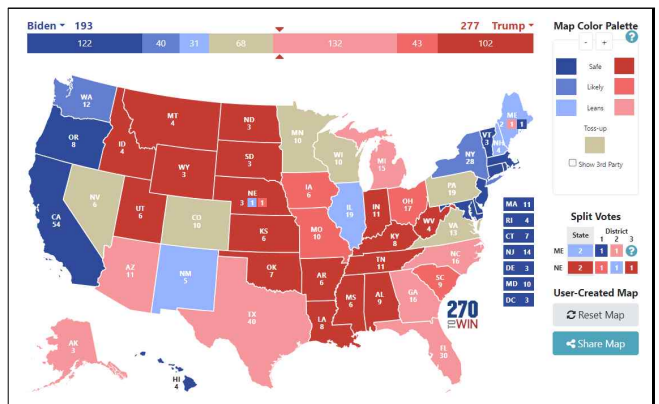
* '20년 대선 결과 선거인단 확보 : 바이든 306명 / 트럼프 232명

< 2020년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결과 >



[자료] 270towin.com

< 2024년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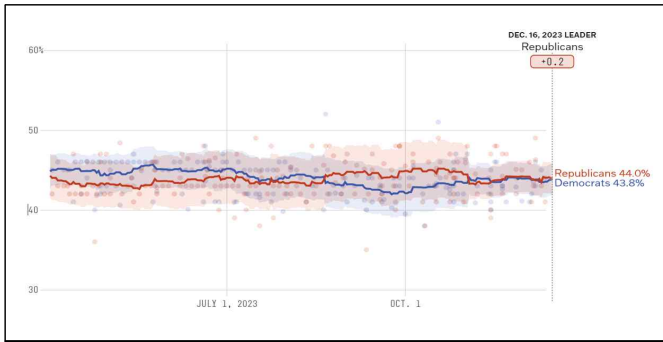


[자료] 270towin.com(12.19 현재)

④ 상·하원 의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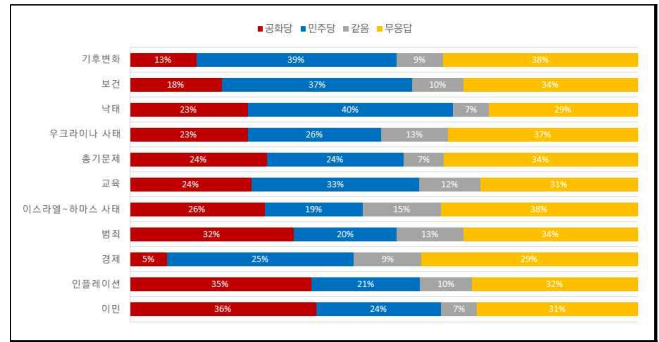
- (양당 지지율) 민주당-공화당 중 정당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가 민주당에 0.2%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임. * 공화당 44.0% : 민주당 43.8%
- '공화당이 경제에 더 잘 대응할 것' 여론이 35%로 민주당(25%)보다 우세. 그밖에 이민, 인플레이션, 범죄, 이스라엘 사태 등에서 공화당에 높은 신뢰

< 민주당-공화당 정당 선호도 조사 >



[자료] fivethirtyeigh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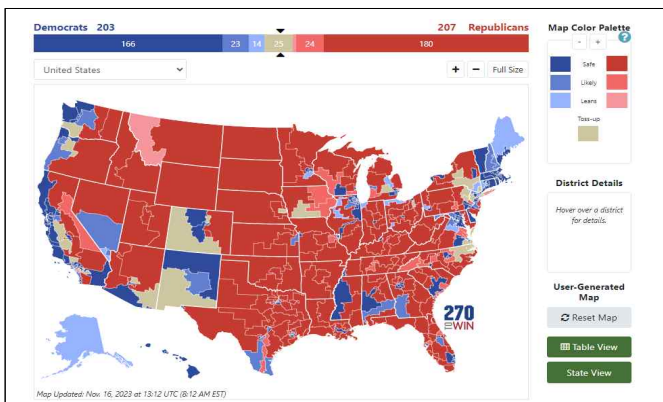
< 정책별 민주당-공화당 능력 평가 설문 >



[자료] ABC News/ipsos(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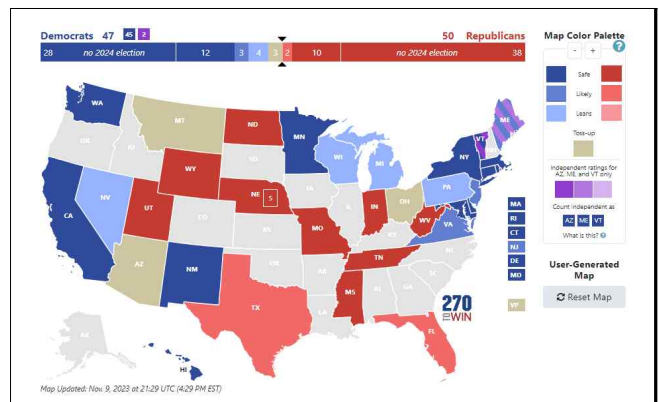
- (하원) 선거구 여론 분석 결과, 공화당이 박빙 우세로 다수당 지위 유지 예상
- 435개 선거구 중 공화당 207개 우세, 민주당 203개 우세. 경합지역 25곳이 승부처
-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33개 선거구(보궐 2개 제외) 중 23개가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구도라는 분석이 주류
-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지역구(애리조나, 몬테나, 오하이오)가 박빙 지역으로 분류, 이 중 최소 1개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 다수당 탈환

< 2024년 하원 선거 결과 전망 >



[자료] 270towin.com(11.16 기준)

< 2024년 상원 선거 결과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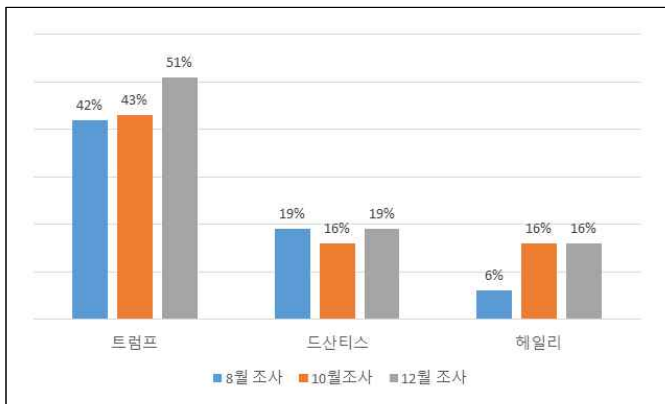
[자료] 270towin.com(11.9 기준)

3. 주요 관전포인트 [12월 현재 기준]

① 누가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기를 잡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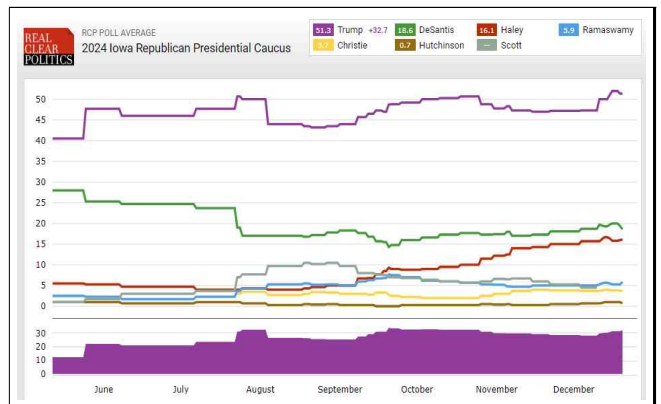
- 내년 1.15 개최되는 공화당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관심 집중
 -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내년 공화당 후보 결정을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역할
 - 일반적으로 조직 동원력이 강하고, 보수 개신교 성향이 짙은 후보에 유리 평가
 - * 프라이머리와 달리 코커스는 유권자가 특정 장소·시간에 모여 공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아이오와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우세 유지**
 -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트럼프 포함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12월 현재 **트럼프가 여론조사 평균 과반의 지지 획득, 2위 후보와 30% 이상 격차**
 - * 최근 여론조사(12.19), 트럼프 지지율 51.3% 도달. 8월(42%)과 10월(43%) 대비 상승세 완연
- 론 드산티스 또는 니키 헤일리, **당내 2위 주자 경쟁에 더 큰 관심 집중**
 -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2위 후보로 부상할 경우, 반트럼프 성향 공화당 지지자의 구심점이 되어 경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
 - 여론조사 평균(12.19 기준) 드산티스가 18.6% 지지율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16.1%)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아이오와 공화당 후보 지지율 추이 >



[자료] NBC/Des Moines Register/Mediacom(12.11)

< 아이오와 공화당 후보 여론조사 평균 >



[자료] RealClearPolitics(12.19)

② 트럼프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 전망

○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4개 형사 사건에서 총 9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

- 4건의 형사 사건은 (1) '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2) 조지아주 선거 개표 방해, (3) 성 추문 무마 의혹, (4) 기밀문서 유출 및 조사 방해 혐의로 구성
- 법원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 시 트럼프는 **최대 700년 형에 처할 위기**

<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기소 현황 >

형사 사건	범죄 혐의	관할 법원	사면권 보유	최대형량
1 연방 선거 방해	선거 공무 방해 관련 중범죄 혐의 4건(국가 기만과 권리 행사 방해 등)	연방법원 (워싱턴 D.C.)	대통령	55년
2 조지아주 선거 개입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공무원 회유, 문서 위조 등 13건	조지아주 법원	주 정부 사면위원회	76.5년
3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유출, 반납 지연 및 공무 방해 등 40건	연방법원 (남부 플로리다)	대통령	450년
4 성 추문 무마	회계 조작, 선거 자금법 위반 등 34건	뉴욕주 법원	뉴욕 주지사	136년

[자료] 폴리τικο, 포브스 등 언론 종합

○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트럼프 공직 출마 자격 정지 심판 진행 중**

- 수정헌법 14조(섹션 3)에서 “헌법 수호를 서약한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공직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규정
- 콜로라도, 미시건, 미네소타 등 10여 개 주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진행
- 11.17 콜로라도 법원은 트럼프가 1.6 의사당 침탈 사건을 주동하여 반란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으나, 수정헌법 14조 적용 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정하고,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인정 ⇒ 고발자 항소로 콜로라도 대법원 최종심
- 12.19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주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확정 ⇒ 트럼프 측, 연방 대법원에 즉시 항소 예고

< 트럼프 대통령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 >

① 대선 이전 1심 유죄 확정 ⇒ 트럼프 법정 구속 ⇒ 옥중 출마 강행

- 헌법이 규정한 대선 출마 자격에 기결수 또는 범죄 전력자를 제외하는 조항 부재. 따라서, 트럼프 옥중 출마 후 기결수 신분으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 배제 불가
- 당선 후 트럼프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상대로 3권 분리 위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는 구속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사면 또는 형 집행 정지 가능성 ⇒ 위헌 소송 제기 ⇒ 연방 대법원이 셀프 사면 효력을 최종 판정하게 됨.
* 다만,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 판결에 한하며, 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행사 불가
-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가 분열을 우려해 트럼프 사면 가능성 제기

② 대선 이전 재판 미결 ⇒ 대선 출마 후 당선 ⇒ 신임 법무부 장관 기소 중지 명령

-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선 이전에 기소된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
- 트럼프 정부 신임 법무부 장관이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연방 기소 건에 한해 기소 중지 명령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 가능. (단, 주 법원 기소 건에 관한 처분 불확실)

③ 수정헌법 14조에 근거 트럼프 피선거권 유지 또는 박탈 ⇒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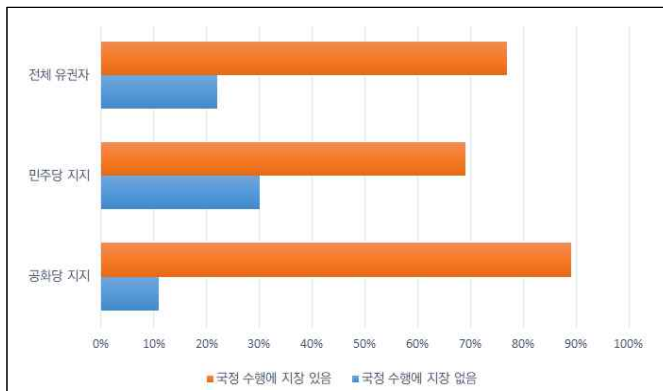
-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 트럼프 항소로 연방 대법원 재판 개시 ⇒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이 피선거권 인정 전망
- 대선 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 ⇒ 콜로라도 주내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성명 삭제 ⇒ 트럼프는 수기 기명 투표 독려 예상 ⇒ 기명 투표의 유효성에 법적 논란 소지 ⇒ 이론상 콜로라도 선거인단(10명) 없이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충분
- 현재 콜로라도 외에도 10여 개 주에서 트럼프 피선거권 제한 관련 소송 진행 중 ⇒ 연방 대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전체 50개 주 트럼프 피선거권에 중대 영향

[자료] 주요 언론 보도 종합 분석

③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민주당 지지층 불안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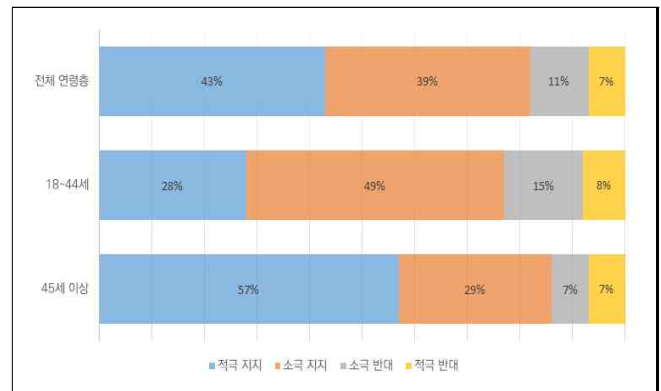
-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건강 우려 속에 젊은 유권자로부터 미온적인 지지
 - 유권자 중 77%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 지지 유권자 65%가 바이든의 고령에 의문 제기(로이터 조사, 9.15)
 - 전체 민주당 지지 유권자 사이에 바이든 적극 지지율이 43%이나, 젊은 민주당 지지층(18~44세)에서 적극 지지 의사는 28%에 불과

<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대한 여론조사 >



[자료] AP/NORC 여론조사(8.10~14)

< 민주당 지지층 연령별 바이든 지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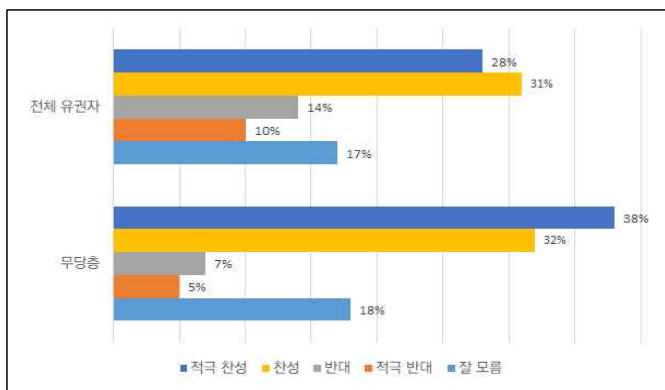
[자료] AP/NORC 여론조사(8.10~14)

-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이 40%에 육박 (CBS 조사 12.6~8)
 - 바이든 출마 반대의 이유로 △건강(93%), △임기 중단 사태(67%), 차세대 지도자 필요(62%) 등 나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대부분
 - 사회적 정의를 추구(87%)하는, 한층 진보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85%)고 응답
 - 다만, 출마 반대 응답자 중 35%만이 바이든 대신 지지할 후보가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 외에 민주당 진영 내 뚜렷한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
 - 희박한 경우이지만, 바이든 후보 중도 사퇴 발생 시 내년 8월에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4,000명의 대의원이 대체 후보 선출 가능
 - 카멀라 해리스(부통령),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만(미시건 주지사) 등 대안 후보 거론, 본선 경쟁력 한계 평가

④ 케네디 주니어 출마로 부상한 제3 후보 변수, 누구에게 악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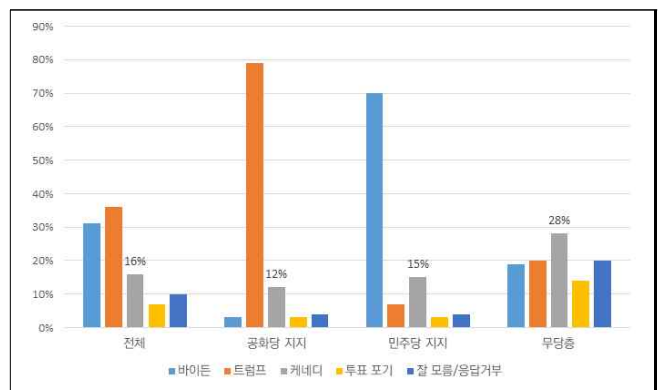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내년 대선에 독자 출마를 선언(10.9)해 중대 변수로 등장
 -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가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당선을 결정지은 전례 존재
 - * 1992년 로스 페로 후보가 약 19%를 득표해 클린턴 대통령 당선에 기여,
 - 2000년 랄프 네이더(득표율 2.7%)가 앨 고어-조지 부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
- 미국 유권자 사이에 양당 독과점에 대한 피로감과 제3 세력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최근 여론조사(Reuters/Ipsos 12.5~11)에서 양당제 정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대안 세력에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가 무려 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케네디 출마가 트럼프보다 바이든 지지율을 더 잠식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 케네디 지지 응답자 여론이 16%에 달해 본선에 상당한 영향력 과시
 - 바이든-트럼프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안 승부 팽팽
 - ⇒ 케네디를 추가한 3자 여론조사 결과 36:31로 트럼프가 바이든에 우위
 - 무당층 유권자층에서 케네디가 28% 지지를 얻어 트럼프(20%), 바이든(19%) 앞서

< 민주·공화당 외 제3 후보 지지 의사 여론 >



[자료] Reuters/Ipsos 여론조사(12.5~11)

< 바이든-트럼프-케네디 가상 대결 여론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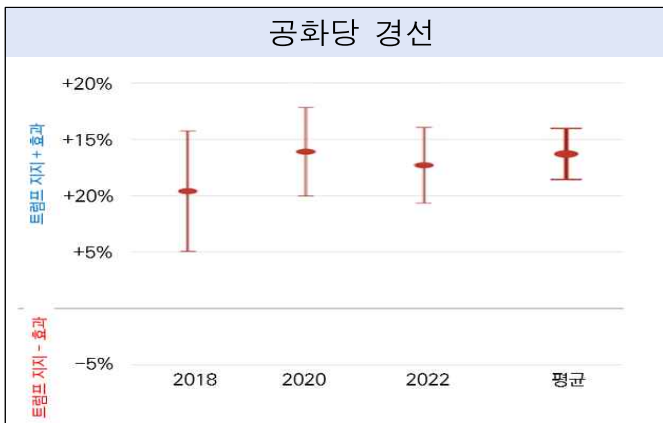
[자료] Reuters/Ipsos 여론조사(12.5~11)

- 일부 여론조사 결과, 케네디 출마 시 각각 바이든과 트럼프로부터 각각 동등한 지지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분석 (Monmouth University, 11.30~12.4)
 - 케네디 지지율이 최대 21%를 기록한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 각각 14%의 지지율을 흡수할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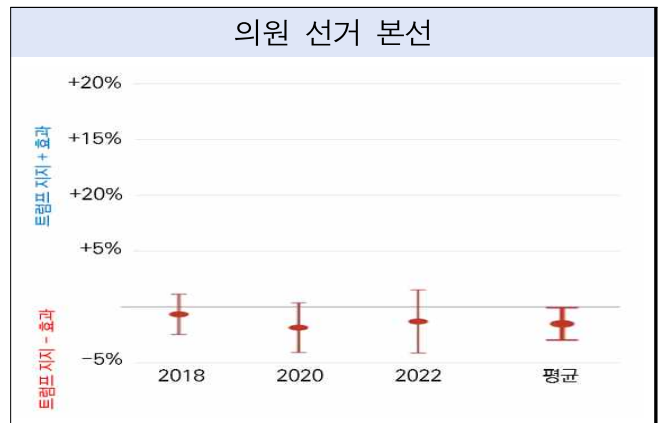
5 트럼프 카드는 공화당에 독일까, 약일까?

- 민주당 또는 중도층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강력한 비토 정서 확인
 - 반트럼프 유권자가 적극 투표장으로 집결하는 효과로 바이든 반사이익 가능
- 공화당 진영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세는 확실하나, 내년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카드의 유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여론 존재
 - 지난 '22년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의 후보 지지가 공화당 경선에서 플러스로 작용했던 반면, 본 선거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
 - '18, '20, '22년 연방의회 선거 분석 결과, 트럼프 지지가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들에서 평균 14% 플러스, 본 선거에서 1.5% 마이너스로 작용

< 연방의회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의 긍·부정 효과 분석 >



[자료] Michael Heseltine / Washington Post



[자료] Michael Heseltine / Washington Post

- 반트럼프 및 낙태 등 사회 이슈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부진 역력
 - '24년 대선 전 마지막 선거가 되는 올해 지방선거(11.7 개최)에서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공화당 우세 또는 경합지역 다수에서 약진
 - 민주당은 △켄터키 주지사 선거 △버지니아주 주의회 선거 △펜실베이니아 대법관 선거 △로드아일랜드 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 쟁취
 - 낙태권 찬반을 두고 열린 오하이오 주민 투표에서 56.6%대 43.4%로 찬성이 크게 앞서면서 내년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전국적 이슈화 전망

4. 2024년 트럼프 대선 정책 공약

경제·산업

□ 연방정부 예산 낭비 방지로 납세자 권리 보호

-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된 ‘재정 압류 권한’을 복원하여 방만한 정부 지출 통제 예고
 - * 재정 압류 권한(Impoundment Authority) :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도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당 예산 항목의 지출을 취소할 권한. 의회는 '74년 의회예산압류제한법 통과로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재정 압류 권한 행사를 제한한 바 있음.
- 트럼프는 행정부처별 예산 낭비 실태 파악 후, 재정 압류 권한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취소. 이로써 △재정 적자 축소 △인플레이션 완화 △감세 달성 주장
- 사회보장제도(노약자 공공의료보험 및 연금 등) 축소 절대 반대. 무익한 해외 원조, 불법 이민 지원, 각종 젠더·환경 프로그램 등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 재원 보존

□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통해 조속한 금리 정상화 추진

- 치솟은 금리로 인한 금융 불안, 리세션 우려 가중.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동시에 물가 억제 가능 주장

□ 미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퀀텀 리프’(New Quantum Leap) 정책 제안

- 신도시 건설 :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공유지를 불허함으로써 전국 10개의 ‘자유도시’(Freedom City)를 건설 ⇒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교통·운송 혁신 견인 : 수직 이착륙 운송 수단(Takeoff-and-landing vehicle)에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항공 모빌리티 기술로 신산업 및 교통수단의 대전환 실현
- 미국인을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 : ‘출산 보너스’ 제공, 주택 공급 확대, 자동차 구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공약
- 전략적 국가 제조업 이니셔티브 : 경제적 소외지역에 제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재도약 ⇒ 소외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수혜 지분 배분

- 전국적인 생활 환경 현대화 및 미화 캠페인 :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노후화한 도심 재개발, 공원 및 편의시설 개선, 모뉴먼트 건설 등 대대적인 토건 사업 추진

□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국내 자동차 제조업 활성화

- 바이든 정부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 전면 백지화.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 기업·노동자 권익을 훼손하고 중국 전기차 산업을 부양한다고 비판
 - 중국 등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 중단
- 불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규제 취소, 휘발유 가격 인하 등 정책으로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확대 ⇒ 전통 자동차 산업 기반 및 노동자 보호 추진
-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강력한 무역 수단 이용 불사. USMCA와 같은 무역 협정의 엄격한 집행,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 예고

무역·통상

□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으로 복귀

- 과거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정책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 경제 치적을 견인했다고 주장. 집권 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 표출
 - 미국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 대중 규제, 국내 제조업 강화 등 정책 강화 예고

□ 전 세계 수입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제도 도입

- 자국민 대상이 아닌 외국 수입에 과세하는 것이 미국에 이롭고 정의롭다고 설파
 -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율을 추가 적용하되, 일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도입 검토
-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환율 조작 시도,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10% 기본 관세에 추가로 징벌적 세율 적용 방침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 공약

- WTO 체제하에서 미국 수출이 외국과 비교해 **고율의 관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 국제 관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원칙 요구
* 전 세계는 미국 보다 평균 2배 높은 관세율 적용(중국은 341%, EU도 50% 이상 고율 적용)
-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하여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평등화
- 대통령은 미국이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 수출에 적용하도록 외국과 협상하고, 합의 불발 시 상응하는 고율 관세를 명령하도록 제도화

□ 대중 의존 완전 종식을 위한 무역정책 추진

-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고율의 대중 관세 체계 신설 주장
- 중국의 제3국으로 통한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수립
-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및 매각 종용
- 중국인(기업)의 미국 에너지, 기술, 통신, 농업용지, 천연자원, 의약품 및 기타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 금지. 중국의 기투자 자산은 매각하도록 강제 추진
-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핵심광물 포함)하는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
- 안보·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의 미국 내 영업 금지 등 주장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취입 즉시 폐기

- IPEF를 자신이 폐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버전 2라고 폄하하며,
- “아시아로 아웃소싱을 촉진하여 미국 농업·제조업을 침탈”하는 IPEF 폐기 공약

에너지·환경

□ 값싼 에너지·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자립 및 제조업 부흥 촉진

-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미국·비시장·비생산적으로 규정, 전면 폐지 주장
- 에너지부 등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중단, 각종 환경 명목의 비시장적 규제 철폐

- 셰일·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등 정부 지원 총동원
 - 전통 에너지 산업 중흥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견인 주장
 -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및 AI 경쟁력 추동
-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미국 에너지 잠재력을 위협하는 그린뉴딜 일체 중단
- 핵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핵 시설 재가동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육성

□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 철폐

- 바이든 정부 ESG 투자 규정이 은퇴자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
 - 이에,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발휘해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을 중지하고, 추후 의회와 협력 입법을 통해 영구 금지하겠다고 공약

보건·의료

□ 대중 의약품 의존 종식으로 국내 보건 공급망 재건

- 국내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미국산 조달을 의무화하는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및 의약품 수입에 단계적 관세 도입 방안 제시

□ 대형 제약사의 국내외 의약품 가격 차별 시정

- 행정명령으로 제약사의 외국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 내 가격은 인하하도록 압력

□ 아동 만성 질환에 대처

- 급증하는 아동 만성 질환 대처를 위한 대통령 특별 위원회 신설. 대형 제약사 등의 의료 카르텔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

□ 국내 마약 중독 문제 해결에 총력

- 국제 마약 카르텔 소탕과 밀수 방지를 위한 군사 자산 및 외교적 역량 동원. 마약 거래상에 사형 입법 추진, 펜타닐을 연방 관리 물질 지정, 중독자 재활 정책 확대 등

외교·안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즉시 종결

- 취임 후 24시간 내 협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
 - 국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제3차 대전으로 확전을 예방

□ 미국의 고갈된 국방력을 재건

-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복원하여 동유럽의 평화와 안정 정착
 -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투입된 예산 2,000억 달러를 EU에 배상 요구
- 군대 재건을 위해 기록적 예산 투입과 미군의 전통과 자부심을 고취할 지원책 마련

□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 전 세계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온 돔과 같은 최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최선

기타 정책

□ (이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중단

- 불법체류자 대상 일체의 무상 복지 제공 중단.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공주택 임대 금지 재개, 모든 취업 허가 중단, 불법체류 출생자에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등

□ (치안)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계획 공개

- △지방 경찰 예산·인력 확충 △경찰의 제한적 불심검문 권한 인정 △검찰의 불기소 권한 행사 감사 △조직·마약 범죄와 전쟁 △미성년자 처벌 기준 개정 등 내용

□ (교육) 미국인들이 무료로 고등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설립

- 대형 사립대학의 기부금 펀드에 과세함으로써 아카데미 설립 재원 마련 추진

참고자료 **트럼프의 정책 참모가 제안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2.0**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자유무역 도그마와 헤어질 결심'

- 올해 6월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 (No Trade is Free) 출간
 -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입안, 미중 무역 협상 진두지휘. **트럼프 재집권 시 재기용 전망**
-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등 **고강도 탈 중국 정책 시사**
 -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까지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지위 박탈 주장
- **동맹·우방국과 무역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관철** 요구
 - FTA 체결국 및 우방국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무역 조치 필요성** 역설
- **WTO 등 다자 경제 협력 체제 불신임,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 개혁** 요구

◆ 피터 나바로 전 무역보좌관,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이론적 토대 제공

- 헤리티지 재단 발간 '2025년 보수 집권 정책 의제' 보고(23.4월)에서 무역 분과 저술
-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WTO 최혜국(MFN) 대우 제도 문제 시정** 주장
 -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통계 수치로 입증
- 국제 관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필요
 - '미국 상호무역법' 입법 실현으로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가 583억~636억 달러 감소 분석
 - 주요 교역 상대국(일본, EU 등)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요구
- 중국의 중상주의적, 비시장 관행에 맞서 **매파적 대중 무역 조치 주문**
 - (1) 모든 중국 수입품 대상 관세 인상 (단, 전략 물자 수급 고려 필요)
 - (2) 미국 기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 (3) 중국산 미소 수입 관세 면제 제도 폐지
 - (4) 중국 국영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
 - (5) 틱톡, 위챗 등 모든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영업 중지
 - (6) 중국의 대미 첨단 기술 관련 투자 금지
 - (7) 미국 회계 감사 기준 미충족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폐지 등
 - (8)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군수 제품 등 대중 디커플링